

표지와 같은 면지

- 제3차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포럼 -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CONTENTS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사회 : 김은옥 수석연구위원(민주연구원)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i

❖ 축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ii

❖ 발제

-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1
김준형 교수(한동대)

❖ 토론

- 트럼프 방한 평가 :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이슈를 중심으로 13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관계 19
신성호 교수(서울대)
-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27
김흥규 교수(아주대)
-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35
고유환 교수(동국대)
-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43
조구래 북미국장(외교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평가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3차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은 동북아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심층 논의하는 외교안보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 하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강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협력, 경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의 중요한 동맹’임을 강조했으며 ‘한국을 우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근거없는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60년 동맹의 신뢰를 확인받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양국 정상이 정책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내용, 한미FTA 협상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외교안보포럼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마련과 우리의 외교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해 한국이 어떠한 외교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발제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 11. 14.

민주연구원장 김 민 석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만에 국민방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의미를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제3차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석 원장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외교안보포럼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실 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도발에 관한 동맹 차원의 굳건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경제성장으로 한국이 이뤄낸 기적에 찬사를 보내면서, 혈맹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코리아 패싱’ 논란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책기조를 공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등 당면한 과제도 국익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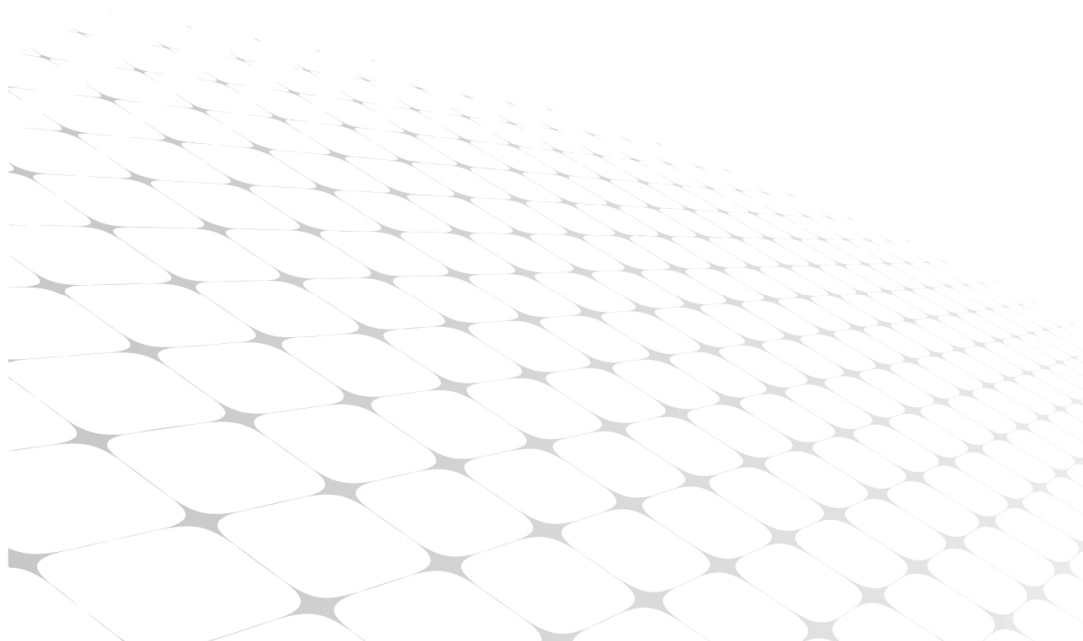
2017. 11. 14.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 미 애

발 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김준형 교수(한동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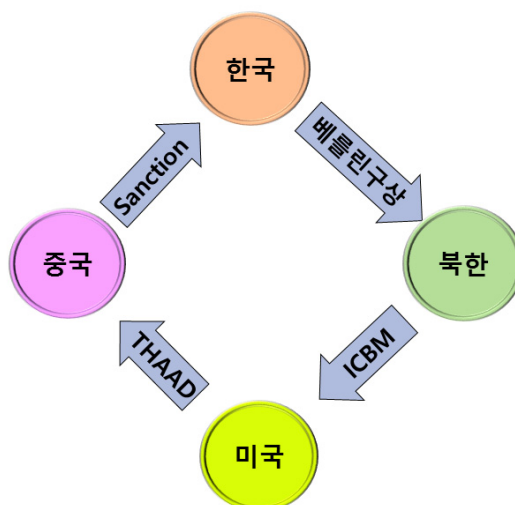
김준형 교수(한동대)

I.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한 전후 분석

■ 6월 문대통령 방미와 첫 한미정상회담

- 공동성명 6개항: 1) 한미 동맹 강화; 2)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3) 경제성장 촉진 위한 공정 무역 발전; 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자 협력 증진;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6) 동맹의 미래
- 성공적인 첫 상견례 vs. 차이 확인
- 되찾아온 운전석: 2개의 동결론, CVID원칙 재확인
- Free vs. Fair Trade 공방 시작

■ 첫 정상회담 이후



- 북한의 지속적 도발: My way, My Plan
- 金正은과 트럼프의 말폭탄 교환으로 인한 위기 고조
- 문재인정부: Positioning or zigzag?



■ 트럼프 방한 전 주요 고려사항들

- 두 정상간 4번째 만남 & 3번째 양자 정상회담
- 트럼프의 첫 아시아 5개국 순방과 25년만의 첫 국빈 방한
- 목표 설정: 한국입장 적극 개선 vs. 환대 통한 Damage Control
- 말 폭탄: 유엔연설의 재현에 대한 우려(Little Rocket Man)¹⁾
- 일본, 미일동맹과의 비교 문제: 아베의 대미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외교의 차이 부각 우려
- 10월 31일 한중간 3가지 불가 입장 표명: 1) 사드추가배치; 2)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3) 한미일 군사동맹
-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트럼프 방한 직전 언급: 군사옵션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 국내지지층을 향한 행보 (FTA 폐기 압박 언급 가능성)

1)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 트럼프가 'Little Rocket Man'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며, 이를 방한 중에 반드시 언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음

■ 한미정상회담

- 26분 단독, 30분 확대정상회담
- **역할 교환과 상대배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 협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한 반면, 문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언급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재확인
-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 수십억 달러 구매 계획이 있고 일부는 이미 승인이 났으며, 핵추진잠수함 협의 진행 중

■ 공동기자회견

- **트럼프**: “북한은 전 세계적 위협이고 이에 대해선 전 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군사옵션)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 “지금 모든 카드를 보여줄 수는 없다.”
-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여전히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즉답 회피
- **문재인대통령**: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
- **Korea Passing** 묻는 기자에 대해서 트럼프는 **No Skipping**이라고 답변

■ 트럼프 국회연설

- **주요발언**
 - “미국의 힘 의심하지 말라” :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 높임
 - “동맹국이 협박과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언급하며 힘을 통한 평화 유지 강조: 미국은 완전하게 그 군사력을 재구축하고 있으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 가장 새롭고 발전된 무기체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북한의 인권실태 맹비난: ‘잔혹한 독재자, 노동수용소의 강제노역, 고문, 강간, 살인
- 남한관련 언급 3분의 1인 반면 북한관련 언급은 3분의 2: 전자는 한국이 이룬 업적에 대한 찬사에 집중, 후자는 북한체제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발언 일색

II. 트럼프 방한 평가

1) 한미동맹의 견고함 재확인과 동맹 비용 상승의 딜레마

- 트럼프가 여러 차례 단순한 동맹 이상으로 위대한 동맹, 영속적인 동맹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 언급
- 대북압박 정책 견지 → 한반도 위기 조성 → 한미 동맹 강조 → 동맹비용 상승 → 대미의존도 및 미국의 대한국 레버리지 상승
-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 국익 챙기기: FTA, 주둔분담금 협상, 3입장에 대한 반대 압력

2) 우려했던 돌출발언에 대한 damage control 일정 정도 성공

- 유엔 연설처럼 북한을 전면 파괴한다는 등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거나,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은 다행히 없었고 시종일관 신중하고 톤다운 모습 유지
- 이런 트럼프의 다른 모습은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도 공감: 직설, 과격, 공격적인 수사가 없어지고 수위도 낮아졌음
- 북한에게 대화여지를 남긴 것은 그나마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회연설에서 대북 강경발언으로 인해 대화유인이 되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아쉬움

3) 성공적 방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다? → Group Think 오류

- 통상 압박 :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표현, 기자회견문에도 한미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언급²⁾
- 무기구입: 수십억 달러의 미국 첨단 무기구매 약속받았으므로 미국의 대한무역적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자체 방위력 및 한미연합방위력 향상을 위해 최첨단 군사정찰자산을 획득하고 개발협의 시작했다고 언급
- 당선 1주년의 성과 자랑과 연결(America First):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무기를 팔았고, 이것이 무역역조를 해소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국익 및 국내용 행보)
- 이에 반해 문재인대통령의 협상론과 평화이니셔티브가 제대로 강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평가 가능

4) 트럼프의 대북강경입장의 변화?: Group Think 오류

- 언론과 정부의 대체적 평가는 트럼프의 강경어조가 눈에 띄게 달라진 점,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던 트럼프가 협상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북입장 변화라고 하지만 이는 분석오류 또는 희망적 사고 의한 오판
- 한국배려 vs. 특유의 전술 vs. 입장변화 신호탄?: 트럼프의 발언수위가 낮아졌고, 과격함이 톤다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노선 또는 입장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
- 조지 W. 부시 Deja vu or worse?: 폭정의 전초기지, 피그미, 악의 축 등 상대방을 부정, 혐오, 깔보는데 대화모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음
- 마찬가지로 부시행정부의 전례에서 보듯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우선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성급함: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커짐

2) 방일 중에도 트럼프는 무역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언급

5)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 11월3일 동남아순방 앞두고 싱가포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균형외교 의사 밝혔고, 한미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확인³⁾
-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balancer)'과 박근혜정부의 소위 실용적 균형외교(alignment)'의 차별화 관건
- **문대통령의 균형외교 정의:** 과거와 달리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전략. 즉 미국을 설득시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미·중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한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
- 미중갈등 및 미국의 한미일 동맹구축에 대한 대비
- 가장 큰 독립변수는 미중관계지만, 한국의 외교력도 중요

※ 한중 3가지 입장 발표 vs. 미국의 반발

- McMaster: 한국의 3불입장을 주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경화장관의 발언이 확정적(definitive)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기존 수도권 방어체계에서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 수도권 주민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 안보수요 시사
- WSJ 11월7일: “South Korea’s Bow to Beijing: Seoul caves on Thaad missile defenses and a democratic alliance.”
- 사드에 관한 중국의 투트랙 정책과 약속 발언에 대한 한국의 항의
- 5일 청와대 발표: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갔을 때 문대통령은 아베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Indo-Pacific vs. Asia Pacific:**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아베의 다이아몬드 전략의 수렴과 한미일 군사협력과의 연계시도의 서막⁴⁾

3) 문재인대통령은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서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ASEAN), 러시아, EU(유럽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힘.

4) 아베가 작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에서 발표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임. 소위 다이아몬드 구상은 2012년 12월 아베의 2기 정부가 출범 당시 발표된 외교전략의 일부로 등장했음

- 한미정상회담 언론발표문에서 사용
- 최근 미국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
- 아베 의중 적극 반영: 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
-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는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가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적절한 지역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명

■ 트럼프 방중 평가

• 중국의 북핵 Posi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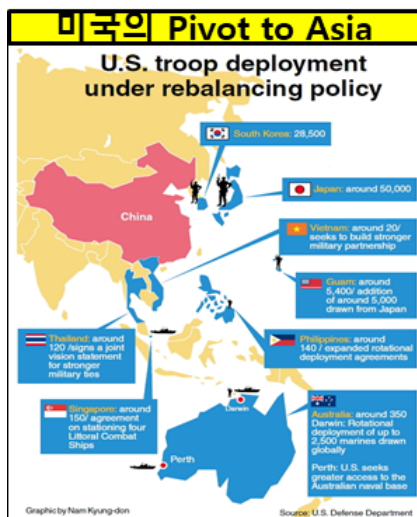
- 중국과 한미일의 인식은 비핵화 총론 같으나 각론(속도, 과정, 방법론) 차이: 대북제재의 한계 인식, 해결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
- 제재만능주의 비판: 제재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긴장만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식
- 초기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아웃소싱 구도 잠정 수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secondary boycott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회피와 중국에게 떠넘기기로 인식
- 쌍중단/쌍궤병행의 기본 제안 지속 주장: 북한의 선평화협정과 미국의 선비핵화의 절충안 인식
-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 대화 통한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 고수

• 트럼프 방중 총평

- 방중 전 3가지 아젠다: 1) 북핵 공조; 2) 무역 불균형 해소; 3) 미중 관계설정의 방향
- 북핵 문제: 추가적인 대북조치 없이 원론적 입장차이(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vs. 미국의 힘을 통한 해결)만 재확인했는데, 트럼프는 '매우 심각한'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중국협력을 강조한 반면, 시진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⁵⁾
- 통상문제: 2535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무역약속으로 무마: 구체성과 실효성 논란(시진핑 방미와 유사)

5) 트럼프는 중국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은행계좌 전면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주저하고 있음

- 방향설정: 신형대국관계 vs. 신형국제관계 vs. 인도·퍼시픽
- 미중정상회담과 한국
 - 베트남 APEC에서의 한중정상회담
 - 대북정책에 대한 미중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행보
 - Indo-Pacific Issue vs. 한중 3가지 불가 입장(다이아몬드 구상) 선언



■ 전망

- 북한 2개월간의 도발 중지와 북한의 향후 움직임 변수
- 대치와 위기 국면 장기화 가능성 높음
 - 여전히 트럼프 정책은 일관성이 적고, 이는 부분적으로 전략적 의도
 -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실체: Maximum → (North Korea's Surrender) → Engagement (한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압박과 관여 동시 적용)
 - 4년간의 대선 캠페인 상황: Alcohol Purificatio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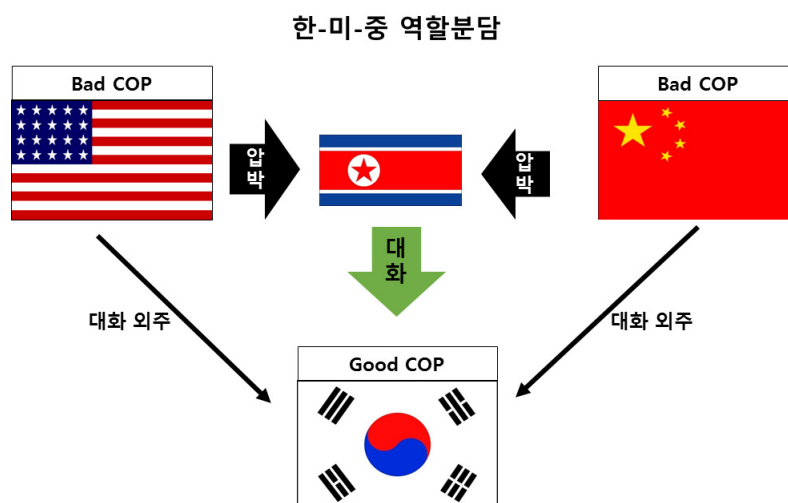
- 비즈니스적 접근: 위기 조장, 최대의 압박, 껌껌이 전략, 극적 타결
- 한중협력과 한미일 협력 사이의 간극: 한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규정(한미일 동맹 불가)한 것은 초유의 일임
- 우리 나름의 해법 마련 필요
- 평창올림픽은 기회이자 위기의 양면성 존재

■ 과제와 전략

- 국내정치 관리
 - 친트럼프 시위와 반트럼프 시위가 보여주듯 잠재된 국론분열
- 트럼프의 성동격서와 아웃소싱전략 대비
 - Tweet, speech 통한 지속적인 판 흔들기 대비
 -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해석, 과민 반응 금지
 - 트럼프의 국내정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비
 - 한일 비교전술에 대비
- 가치 또는 원칙 외교의 강조: 평화, 자유무역, 반테러, 민주주의
- 트럼프의 연계전략과 성동격서에 대한 한국의 대미레버리지 마련(사드 → 통상(FTA)⁶⁾ → 주둔부담금 → 무기판매)
 - 우리도 연계전략 마련해서 proactive 하게 접근할 필요 - 무기구입 - 주둔부담금 - 대화 주도권
 - 한반도 위기상승과 미국의 요구 강화의 사이클 단절 필요
- 한미중의 협력구도 강화에 노력: 한미일 공조의 경우 대북공조에 국한함으로써 신냉전구도 강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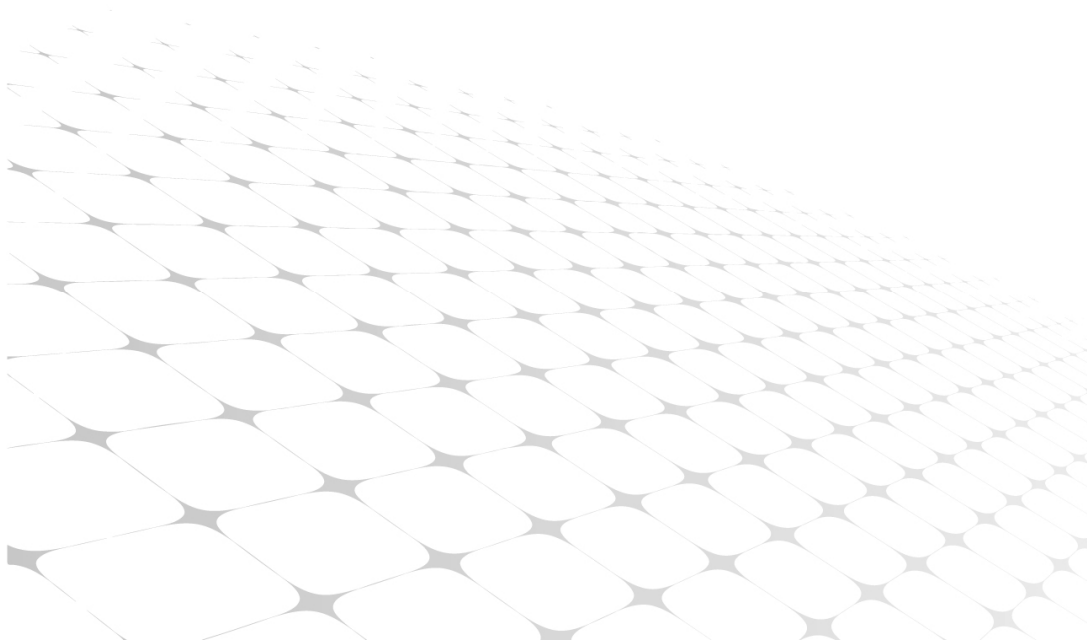
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에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확인해본 결과,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편지’까지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며 “(미국의 위협은)단순한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질적이지 임박한 위협”이라고 말함. 그는 또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이번 방미 기간에 만난 20여 명의 의회와 무역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모두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을 언급했다”고 했다.

-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 제재와 대화시도의 동시병행
-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긴 부담이지만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한국의 대화시도가 미국의 제재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 필요
- 양면(Double-edged) 전략
 - 미 행정부 상대로는 국익위주의 실용주의, 의회와 여론을 상대로는 트럼프정부가 폐기한 가치외교(평화, 민주주의 등) 강조
 - 양면접근 필요: 트럼프에게는 Big picture, 담당 관료들에게는 detail
- 담대한 구상 준비
 - 자포자기적 무기력 vs. 희망적 사고 모두 지양
 - 한국의 positioning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 필요
 - 국내정치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지나친 고려보다는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이 필요함: 우리가 원하는 game changer를 찾아야 함
 - 2개의 입출구론 재확인 필요
 - 1) 핵동결입구-비핵화출구
 - 2) 한미입구 → 남북경유 → 북미출구
 - 우리가 우선 설득해야할 대상은 북한보다 미국과 중국



트럼프 방한 평가 :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이슈를 중심으로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트럼프 방한 평가 :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이슈를 중심으로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1. 트럼프 방한 총평

○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나?

- 낮은 기대 수준, 돌발사태 없는 성공적 회담 -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발언 등 돌발사태 관리에 성공, 북한 이슈에 대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었고, 군사적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 자제
- 그러나 해결된 것은 별로 없는 회담 - 대북정책에 관련된 뚜렷한 성과는 부재, 후속조치들을 주시할 필요
- 가장 중요한 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던 회담 -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의 방위분담 수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한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사실을 적시

2. 북핵문제 해법

-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 및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속도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음.
- 워싱턴의 다수 인사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핵장착 ICBM으로 직접 공격하기엔

아직 미달이지만, 현재 추세라면 북한은 1~2년 내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미국 역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택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군사적 억제력 확보가 유일한 북핵 해법이라고 인식
-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협상을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을 봉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었고 지금도 그리하며 앞으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 현 단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global pressure campaign'이라 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억지와 봉쇄(containment and deterrence)에 집중할 전망

○ 북핵 문제에 관한 한 한, 미, 중이 '三色異夢'을 갖고 있는 상황

- 문재인 대통령은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해법을 제시
-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중국 정부는 '쌍중단'(雙中斷, 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雙軌並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방안을 주장 - 삼자 간에는 중요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이들 방안들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한·미·중 3국의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 될 전망

3. 한미동맹 의제 관련

○ 한미동맹의 역량, 특히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에 대한 합의는 긍정적

-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
-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

-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
-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엇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
- 단, 전작권 전환 문제는 발표문에서 미 언급 - 미래 한미연합방위 구조에 대한 중요한 안건은 low-key로 논의하기로 한 것인지, 논의 자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인지 관찰 필요

○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과 사드 관련 3不 정책간 알력 가능성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 -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 사드 추가배치 배제, ▲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불참, ▲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거부라는 3NO 원칙을 중국에 제시해 사드 합의를 도출
- 3不 원칙은 한국의 'self-imposed red line' - 어떤 조건 하에서(예를 들면 북한의 추가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등) 3不 원칙이 지켜질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한국의 과잉 양보
-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언급된 3국간 안보협력,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은 3NO 원칙에 부합하는가? - 해석상의 이견 가능성, 결국 한중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

○ 인도퍼시픽 전략에 대한 시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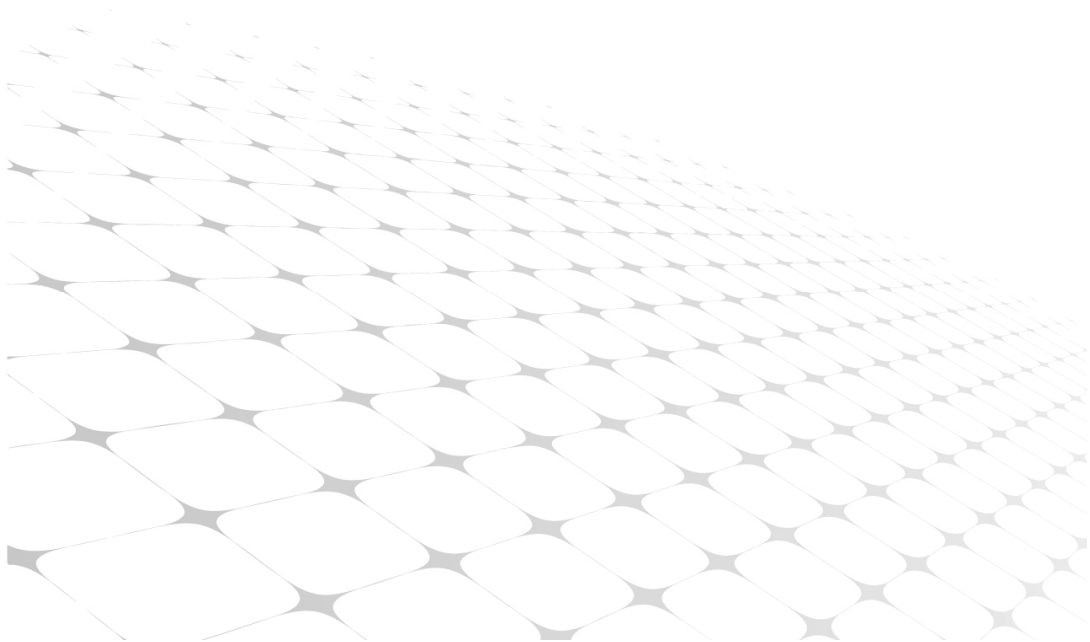
-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 - 국내 언론들은

인도 태평양 라인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인도와 연대해 중국에 맞서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아베 일본 총리의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 완성한 구상이라고 보도

- 아직 트럼프 정부의 인도퍼시픽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 -
아직 한국이 이 개념, 전략의 형성에 있어 영향을 미칠 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참여한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관계

신성호 교수(서울대)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관계

신성호 교수(서울대)

■ 트럼프 당선과 미국 사회의 변화

-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트럼프의 당선: 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 현상으로 불리 우는 미국 사회의 변화: 트럼프가 대변한 미국사회의 욕구는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 국제화에 대한 반대,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 이민자에 대한 반감 등이 포함
- 미국사회의 극심한 분열
 - 트럼프의 당선은 남부와 중부 내륙의 낙후 지역인 아칸소,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루이지애나 등 전통 공화당 지지 기반은 물론 오히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의 산업 노동자들의 이반에 힘을 입었다
 -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대도시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젊은 대학생과 흑인 및 라티노 등 소수 인종이 대표하는 힐러리 지지 세력은 진보적인 사회정책과 개방적 사고를 표방. 반면에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내륙의 전통 백인 중산층과 생산직 노동자들은 보수적 사고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
 - 라티노를 중심으로 한 소수 인종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백인주류층의 위기의식**: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주민들은 2050년이면 백인을 미국사회의 소수로 역전 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백인들이 누려온 정치, 경제적 주도권의 이전을 넘어 낙태, 동성애, 총기소유, 인종문제 등에서 전통 백인 보수층 중심 미국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예고. 백인들이 미국사회의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하는 상황이 도래

- 실제 전체 백인 투표자 중 두 배가 넘는 남성이 63(트럼프) 대 31(힐러리) 퍼센트로 트럼프를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백인 여성의 경우도 여성 비하 발언과 성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53(트럼프) 대 43(힐러리) 퍼센트로 트럼프를 더욱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¹⁾
- **미국 정치제도의 문제?:**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는 미국의 정치제도가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독특한 대선 제도인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대 232로 힐러리에 승리. 그러나 실제 대중투표에서는 전체 1억3천6백만 투표자의 2.1 퍼센트에 해당하는 280 만 명의 상당한 차이로 힐러리가 승리.²⁾ 트럼프가 과연 미국 국민의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대중투표와 선거인단 수의 불일치가 당분간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연안의 대도시 인구나 라티노 등 여타 소수 인종의 비율은 점차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백인 인구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내륙과 남부의 선거인단 수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구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현재의 대통령선거 제도로는 소수의 백인을 대표하는 후보가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남.³⁾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21세기 미국 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뉴욕타임스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⁴⁾
- **미국식 민주주의 쇠퇴? :** 트럼프 당선 후 전국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행태 들은 선거 후 미국사회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정치 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1) Clare Malone, "Clinton Couldn't Win Over White Women," FiveThirtyEight, November 9, 2016 (<http://fivethirtyeight.com/features/clinton-couldnt-win-over-white-women/>)

2) David Wasserman, "2016 National Popular Vote Tracker," The Cook Political Report, December 14, 2016 (<http://cookpolitical.com/story/10174>)

3) E. J. Dionne Jr. "America will soon be ruled by minority,"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7,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america-will-soon-be-ruled-by-a-minority/2016/12/07/fb1491ac-bcb7-11e6-ac85-094a21c44abc_story.html?utm_term=.0240983533fd

4) The Editorial Board, "Time to End the Electoral College,"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9, 2016 (<http://www.nytimes.com/2016/12/19/opinion/time-to-end-the-electoral-college.html?partner=rssnyt&emc=rss>)

갈등을 제대로 조절하는 기능에 한계를 드러냄.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됨.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손상되고 위협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⁵⁾

-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보호주의나 고립주의 경향을 띠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자유세계의 가치와 이상을 대변해온 것으로 여겨진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는 것을 의미 조셉 나이가 주창한 미국 패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연성 권력(soft power)이 무너지고 미국의 지도력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 (시진핑의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이념 역설)

■ 트럼프 외교의 불안정성

- 무지성(파리협약파기), 즉흥성(대만총통 통화), 자기 확신(멕시코 장벽)
- 반 오바마: 러시아, 나토, 중국, 이스라엘, 터키, 두테르테, 기후변화, TPP/NAFTA 파기?, 외교부 축소, 국방비 증액, 부자감세, 의료보호, 군 트랜스젠더 거부, 반 이민, 반 이슬람,
- 혼돈의 백악관과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 선거 중 유일한 외교연설 (2016년 9월7일 필라델피아):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통해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⁶⁾
- 첫째, 새로운 외교정책의 목표로 **미국의 핵심 국익 추구(Advancing America's core national interest)**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이해와 함께 세계 평화나 자유 민주주의의 진작, 인권 보호, 자유 무역 질서의 보호 등을 주장하며 미국의 리더십이나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강조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인 접근

5)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Is Donald Trump a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6, 2016

(http://www.nytimes.com/2016/12/16/opinion/sunday/is-donald-trump-a-threat-to-democracy.html?action=click&pgtype=Homepage®ion=CCColumn&module=MostEmailed&version=Full&src=me&WT.nav=MostEmailed&_r=0)

6) Transcript of Donald Trump's speech on national security in Philadelphia, THE HILL 09/07/2016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campaign/294817-transcript-of-donald-trumps-speech-on-national-security-in>

- 둘째, 미국의 국익 우선과 중동문제에 과도한 개입을 비판한 그의 입장은 **현실주의(realism)적 접근**. 갑작스럽고 과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중동 정책은 타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비판하는 현실주의 접근과 비슷. 중동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상 검증과 배경조사를 통한 이민 통제 역시 추상적인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안보 우선의 핵심 국익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맥락.
- 셋째, 전통 현실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국방력에 대한 강화 의지로 표출**.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시행된 국방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 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약화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고 다짐. 육, 해, 공군에 걸쳐 진행된 주요 무기체계 및 병력 축소를 되돌리기 위해 의회에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의회 예산 지출 정비를 통해 충당.
- 넷째,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 트럼프는 나토(NATO) 동맹국 가운데 국민총생산의 2 퍼센트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 5개국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무임승차를 하지 말고 자신의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질것을 요구. 특히,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대가를 더욱 지불할 것을 강조.
-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 이익 우선 국수주의, 강한 군사력에 근거한 힘의 (협박) 외교, 현실(상술)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관여 정책으로 요약됨**.

■ 취임 1년과 향후 전망

- 주요 공약이었던 의료보험 폐지 및 개혁,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부자 감세를 중심한 세제 개혁 모두 지지 부진
- 40여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발의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공약 추구: TPP 파기,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 파리 기후협약 파기, 연간 영주권자 수를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이는 이민 개혁안 발의,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에 대한 행정소송, 뉴욕 테러 직후 다양성 복권 비자 제도 취소

- 트위터를 통한 진보 언론과의 전쟁 속에 러시아 선거개입관련 특별검사 수사 진행 속에 백악관 내부의 권력 투쟁과 혼란 (플린 안보보좌관 사임, 코미 FBI 국장 경질, 스파이서 대변인 사임, 무치 공보실장 경질, 프리비어스 비서실장 교체, 세션 법무부 장관 경질설 등)
- 백악관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 자식, 사위, 보좌관 그리고 트럼프 자신 (최근 로버트 물러 특검의 선거 캠페인과 측근에 대한 기소: 폴 매나포드, 릭 게이츠, 조지 파파다폴러스)
- 지난 주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를 포함한 지방 선거에서 공화당 참패: 반 트럼프 운동 결집? 2018 중간 선거 향배
- 과연 임기를 채울 것인가?: 탄핵, 내각 퇴위 등 헌법 위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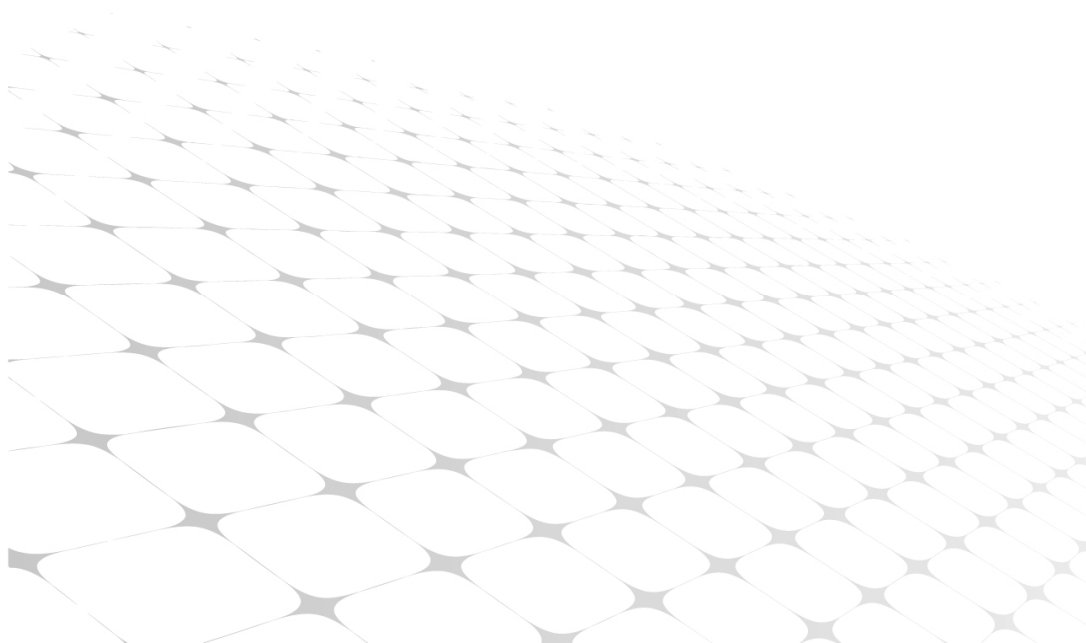
■ 한미관계

- 트럼프의 당선은 과거로의 회귀를 희구하는 미국 사회 전통 보수층의 욕구를 대변
- 이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에 일자리를 뺏기는 원흉이고, 21세기 정보혁명과 기술 발달은 자동화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의 몰락을 의미함.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보호무역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날로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화에 지친 미국의 안정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대변
- 이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트럼프는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에 대해 강한 반감과 회의를 나타냄. 이는 전통적으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정책과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
- 이미 한미자유무역협정 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국에게 훨씬 중요한 TPP를 파기한 상태에서 NAFTA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재협상을 시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미FTA를 희생양으로 삼아 파기도 얼마든지 할 가능성 (실제 트럼프는 지난 8월 말 9월초에 한미자유무역에 관한 중대발표를 예고하며 파기를 사실상 준비하였으나 9월3일의 6차 북핵실험으로 이를 일단은 넘어감)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돌발적 북핵 협상 등의 문제를 넘어 미중간 무역 전쟁과 제2 대만 위기 등의 심각한 외교 도전을 초래 할 가능성
- 트럼프의 강성 발언과 군사력을 앞세운 정책은 안보를 의존하는 우리와 같은 동맹국에게는 더욱 무섭게 다가옴.
- 트럼프의 위협과 협상전략에 추종하고 편승하려는 이유와 유혹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한미동맹에서, 미중관계에서, 북한문제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하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김흥규 교수(아주대)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김흥규 교수(아주대)

1. 중국의 대북 정책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양적인 차원을 넘어 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임.
 - 이는 북중 관계를 특수성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의 도발 억제하고 연루 회피하고자 노력
 - 북한이 여전히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점차 그 전략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고 오히려 부담의 측면이 증가하는 일종의 계류과 같은 상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대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우리 외교의 전제는 중국의 반발과 재제 소극적 이행이라는 또 다른 손실 야기 가능성 존재
-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도 적고 전략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로 상정할 것임.
 - 대신, 북핵문제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핵 개발의 수직적 확산방지(예, 두 잠정 중단안), 북핵 문제로 인한 안전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더 맞출 것임.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의 레드 라인은 한반도 전쟁 발생과 북한 체제 붕괴 억제이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음.

- 중국의 대북한 해법은 한국과 북한, 미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제안한 두 개의 잠정 중단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임.
 - 한국에게는 보다 대담하게 대북 이니셔티브를 취하도록 유도.
 - 북한에 대해서도 UN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적극 동참할 것임.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그에 대응하여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 다만,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대북 압박에는 강하게 저항할 것임.
 - 중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 미중관계, 한국의 대중 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책,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 사정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려 할 것임.
 - 우리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중 간의 북한과 한국, 혹은 남중국해와 한반도 간에 빅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임. 미중 간의 신뢰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임.

2. 미중 정상회담과 북핵공조

- 제19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나 북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당 대회의 주 의제가 아니었음. 그러나 북경에서 11월 9일 개최된 시진핑-트럼프 간의 제3차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경제문제(무역불균형)는 주 의제.
 - 시진핑은 일단 트럼프의 대북 제재에 호응하여 미국과 공조 강화 동의. 단, 이는 대화를 위한 전제임을 분명히 함.
 - 시진핑의 선제적인 대미 투자조치로 무역 전쟁 발발 억제
 - 중국은 러시아와도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할 것으로 보임.
 - 단기 목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한반도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것으로 평가됨.
-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대북핵 공조
 - 내년 상반기 ‘북한 핵동결 선언-한미 대규모 군사연습 잠정 조정-남북관계 개선-북미관계 개선-점진적인 비핵화’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대화가 작동할 가능성

존재.

-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그나마 공유 가능성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 중국 측은 러시아와 더불어 이미 이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역시 추후 국내정치적으로 물리는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이전 북한 문제에 대해 업적을 쌓고 싶어 할 것이므로 이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음.

3. 한 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대중정책

- APEC 계기로 개최한 11월 한중 정상회담은 그간 2년여의 사드 갈등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종식한다는 공개적인 신호. 이를 12월 개최될 북경 한중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해야 함.
 - 중국 최고지도자가 사드문제를 핵심이익이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합의한 것은 중국 측도 큰 부담. 추후 수시로 이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 존재
 -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결심한 것은 최근 강화되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냥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고착화되는 것 우려. 동시에 최근 한반도 상황이 트럼프-김정은 간의 강대강 대결로 무력 충돌의 가능성 강화 추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레드라인에 근접한 것임.
 -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중관계 개선의 경제적 요인설은 부차적인 문제임.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 역시 타격을 입었으나, 비대칭적인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손실임. 안보·전략적 요인이 중요
 - 한중 관계 개선은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닌, 양국이 자제하면서 실리를 취한 Win-Win 정책의 결과임.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드 3 Nos는 중요한 대중 원칙임: 추가배치 불용, MD 체제 가입 불용,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동맹 불가입
- 한국은 향후 더 거칠고, 야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과 대면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해 냉정한 입장이었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사드문제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어 국무위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음. 대신, 미국통인 양제츠 국무위원은 정치국원의 지위로까지 지위 상승. 이는 대북전략이나 한반도 전략을 미중 관계의 틀로서 보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임.

- 중국의 세계 대전략을 진두지휘한 왕후닝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어 시진핑 시기의 대전략을 구체화하려 할 것임. 또한 북한과의 당대당의 관계를 관장하는 데 가장 핵심인물이 되었음.
- 지난 북핵 정책에 대한 전면 리뷰를 했던 푸잉 전인대 외사 위원장은 더욱 중용될 것으로 보임. 이를 관장하는 전인대 상임위 위원장에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잔수가 임명된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줌. 이들의 전략사고는 냉정하고, 거시적이며, 치밀.
- 전임 보수정부에서부터 중국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신뢰를 잃은 한국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대중국 접근이나 호소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 한국과 북한이 모두 더욱 능수능란하면서도 무력 위협을 포함한 노골적인 영향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새로운 중국을 대면하게 될 것임.

○ 대중정책은 이제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다뤄나가야 함.

- 사드배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고 무지한지를 잘 드러내었음. 그 대가를 오늘날 치루고 있음. 중국 지도부가 현재 얼마나 한국 정부나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 손실은 형언할 수 없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중관계에서 문서화를 요구. 한국은 오히려 중국이 패권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고 믿고 있음.

○ 최근 한중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이상, 과신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정치적 신뢰를 획득해 풀어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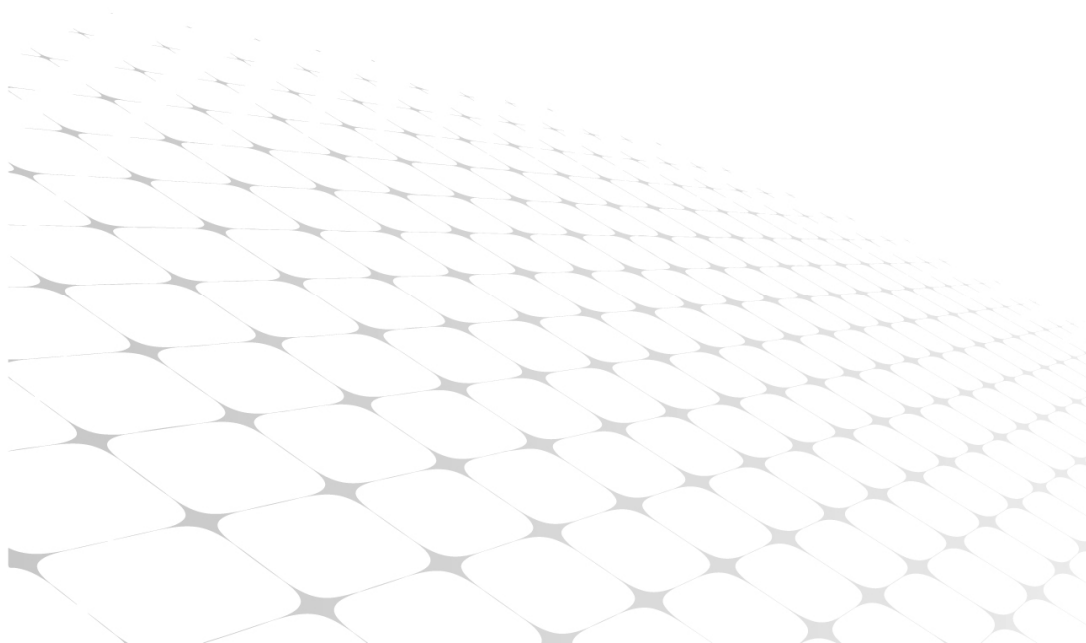
-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당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 다대.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을 우회하는 전략은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세계시장으로 다변화(diversification)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음.

- 현재로서는 중국과 관련한 정책은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비하면서 추진해야 함. 사드 정책과 같은 수준의 정책결정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력이 감당하기 어려움.
- 우리의 정책은 미국이 군사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력 방면에서 우위로 전환하는 시기에 필요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함. 결미협종의 전략.
 - 우리의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창의적으로 필요.
 - 중국의 미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함.
 -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호혜적 책임 전략동맹 추구하면서도 중국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고 방향설정을 하였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 동맹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의 국력 수준이나 한미동맹의 효용을 넘어섬.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는 것 역시 향후 우리 외교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임.
 - 중국과 연대하면서 북핵 공조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공간 확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적극 개척해야 함. 북핵이나 사드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의 대 전략방향과 역량을 잘 점검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대 전략 게임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야 함.
 -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고, 한중 전략적 관계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고유환 교수(동국대)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고유환 교수(동국대)

1. 한미정상회담 평가

□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
 -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이제는 힘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강력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높여 오다가, 한국정부의 전쟁불가 의지를 반영해서 ‘힘을 통한 평화, 억제’로 방향을 잡고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하면서 첨단무기 판매를 통한 실리 추구
 - 한국은 전쟁가능성을 줄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미국산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통한 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주력

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균형외교

□ 트럼프의 지정학: 인도·태평양 전략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일본, 한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국, ASEAN 등으로 확장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맞대응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란 점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인도 태평양지역 구상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청와대는 “미국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다변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
- 인도·태평양지역 개념과 전략은 대중국전략 차원에서 범태평양세력권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의 태평양지역으로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19차 당대회에서 ‘신형국제관계’를 주창하는 등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세력 확산을 추진하자,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지역 개념을 들고 나와 인도, 호주, 일본, 한국, ASEAN을 연결하여 대중국 봉쇄를 위한 세력권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미·중의 세력경쟁과 한국의 ‘균형외교’

- 최근 한·중이 사드문제로 불거졌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으로 부름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과 중국 모두 재인식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표명으로 한·중 사드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복원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의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정부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갈등이 겹쳐질 경우 '신냉전질서'로 재편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탈냉전 이후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군사안보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
 -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어렵게 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중관계 복원을 계기로 '균형외교'가 다시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¹⁾한 바와 같이 균형외교는 미·중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제로섬관계로 볼 필요는 없음
 - 미국과의 군사동맹, 중국과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어느 한 국가에 편향된 외교를 할 수 없음

3.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예상 반응

□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기간 재확인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확인한 북핵해법은 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고(일본방문 11월 6일), 힘을 통한 평화, 억제 시대 개막 (이제는 힘의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ASEAN), 러시아, EU(유럽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대다, 국회연설, 11월 8일), ②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미중정상 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11월 9일) 등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새로운 북핵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하는데 공감대를 이룸

□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면서 ‘관여’(대화) 가능성 모색

-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을 통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고 ‘힘에 의한 평화(억제)’를 강조함으로써 당분간 북미갈등은 숨고르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북한을 ‘교도국가(감옥국가)’, ‘악당체제’,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중단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다”라고 밝혀 ‘관여(대화)의 문’도 열려있음을 확인함
-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다”고 말했고,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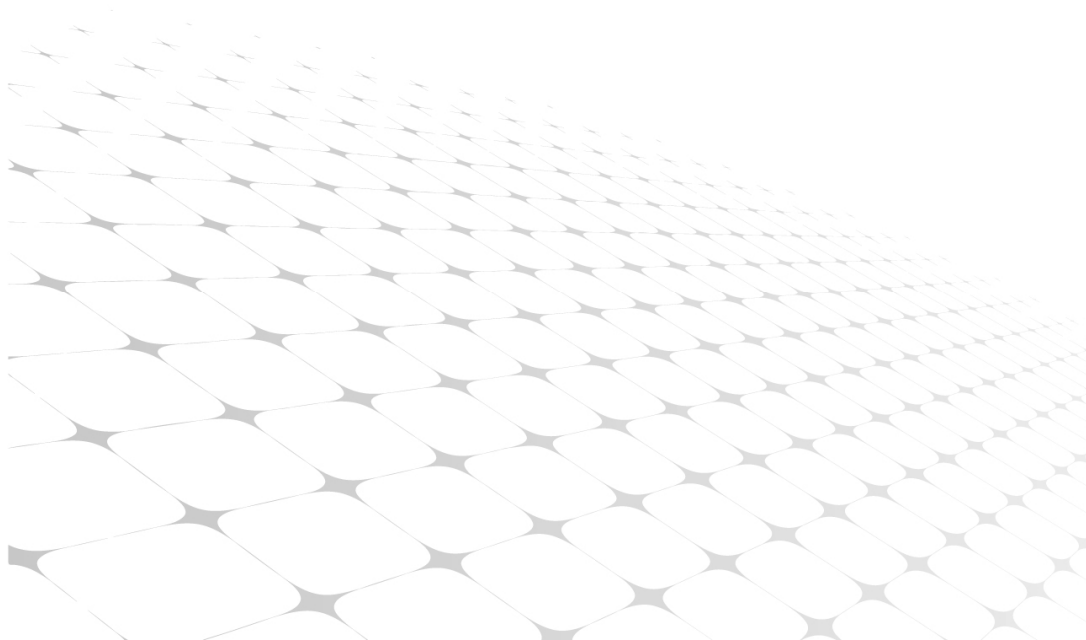
□ 북한의 숨고르기 지속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인 11월 6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11월 8일 국회연설에서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과 ‘시험하지도 말 것’을 경고하면서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둬 북한도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지켜보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후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 검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대통령 방한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조구래 북미국장(외교부)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